



“카지노 대형화 흐름… 지역환원 극대화해야” “경관사유화 우려”… 이호유원지 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도, 제주카지노 영향평가 제도 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
5년마다 허가 갱신 추진… 문광위, 관리감독 강화 주문

세계적으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가 급부상하는 등 카지노 대형화 추세 속에 지역환원 극대화와 관리감독 강화 방향으로의 제주카지노 산업 정책 제도개선이 주문됐다. 특히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 제주도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웅)는 23일 제376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2차 회의에서 제주도로부터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았다.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 결정 시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영향평가 내용은 총 3개 부문, 9개 지표, 18개 측정항목으로 구성됐다. 3개 부문은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기여(200점), 도민의견수렴(300점)이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향후 드림타워 내 카지노 영향평가과정에서 사업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도민고용과 지역사회 기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영향평가와 관련해 지역기여도 부분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며 5

년마다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갱신 허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강 국장은 “갱신 시 허가 당시 약속이행사항 등 여러가지 검토를 통해 갱신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관리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경웅 위원장(무소속, 서흥동·대륜동)은 “영향평가 기준에서 잘못되면 사업만 주고 우리가 얻는 것은 없다. 카지노 대형화를 추진한 싱가포르 정부의 생각을 잘 읽어야한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통제권을 갖고 있는데, 제주도도 그런 영향력을 가져야한다”며 “도민에게 이

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제주도가 제주지역에 대형 카지노가 몇 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할 때임도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인천 영종도의 복합리조트 카지노산업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수립했다”며 “제주는 일찍 복합리조트를 시작하고도 정책방향이 아직 안 잡혀 있다.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23일 제376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서귀포 해양레저체험센터 추진, 행정 안일했나”

행자위, 동의안 심사보류
“주민들 찬반입장 엇갈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해경경관지구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저체험센터 신축 추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행정이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

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회기중 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해양레저체험센터 신축에 대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보류했다. 당초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행자위 한 의원은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주민 동의 확보 등 준비가 부족한 채로 동의안을 낸 건 행정이 안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도는 오는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경관지구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 문선 일대가 해경경관지구로 지정(해양수산부)되면서 국·도비 400억원이 투입돼 서귀포시 서귀동 6번지 등 자귀리공원과 서귀포항 인근 해상 일원에 해양레저체험센터, 해상다이빙교육시설, 해상계류시설 등이 조성된다.

이 중 총 사업비 216억원이 투입되는 해양레저체험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연면적 3000㎡)로 스킨스쿠버 및 실내서핑 체험관, 해수관상전시관, 해양생태교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과거사정리위 활동 연장

2010년 해산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과거사 정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2005년 제정된 과거사진상규명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4년 더 연장하고, 피해신고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인제근 의원 발의 원포인트 법안을 처리했다.

앞으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부미현기자

한도위, 심사보류 결정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약) 협의내용 동의안(이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3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회기 중 2차 회의에서 동의안을 심사했지만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한도위 소속 위원들은 해수욕장에 대한 사유화 우려와 고층 건축물로 인한 경관 훼손, 환경 파괴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도의회는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목적과 무관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사업 부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 주변 경관 독점 및 경관 사유화, 연안 환경 보전 대책 전무, 제주도 숙박업 과잉공급 등을 이호유원지 사업 문제로 지적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보완 및 개선방안 등을 명확히 수립한 후 심사하는게 적절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중국 분마그룹의 자회사인 제주분마 이호랜드가 2023년까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여㎡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은지기자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현직 장관 대상 사상 초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동안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자택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자택 압수수사가 이번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외에 아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아주대와 충북대 로스쿨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조 장관과 부인 정모씨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조 장관 딸 임시, 웅동학원, 사모펀드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8월 27일 조 장관 딸 임시 관련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조 장관 일가의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9월 3일에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연구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23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박스를 들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 제주어 교육 사업

제주 이주민을 위한 ‘2019 제주어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2019 제주어 교육 사업을 지원받아 제주 이주민을 위한 ‘2019 제주어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은 물론, 제주어를 배우고 싶은 도민에게 기초적인 제주어를 교육함으로써 이주민들이 제주에 정착하여 사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2019 제주어문화교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강 좌 명: 제주 이주민을 위한 ‘2019 제주어문화교실’
- 강좌 기간: 2019. 10. 4.(금)~11. 22.(금)
- 강좌 일시: 강좌 기간 내 매주 금요일 13:00~16:00
- 강좌 장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1층 1102호(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 신청 기간: 2019. 9. 23.(월)~9. 30.(월)
- 모집 인원: 50명(선착순)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halla2712@jeju.ac.kr)으로 제출
- 수 강 료: 무료(차량 소지자 일일 주차권 배부)
- 문 의 처: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064-754-2712)
- 강좌 세부 내용

번호	강좌명(주제)	강사	번 호	강좌명(주제)	강사
1	제주어의 이해	신우봉	5	해녀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김순자
2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제주어	배영환	6	관광으로 배우는 제주어	김보향
3	역사 속의 흥미 있는 제주어	강문종	7	매체로 배우는 제주어	김보향
4	음식으로 배우는 제주어	김미진	8	제주 문학으로 배우는 제주어	김동윤

※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민의견 및 제보를 받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주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제안 및 불편부당한 행정사례 등에 대한 의견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요

- 기 간 : 2019. 10. 16.(수) ~ 10. 25.(금)/10일간
- 감사대상기관
 -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행정시 등
 - 도교육청 본청·교육지원청 등

의견 및 제보내용

- 정책제안, 부당사례, 잘못된 업무관행, 도민불편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사항

접수방법 및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접수(분야별 접수처)
 - 도의회에 관한 사항 : 의회운영위원회(☎741-2010)
 - 도 행정에 관한 사항
 - 행정자치위원회(☎741-2020), 보건복지안전위원회(☎741-2030), 환경도시위원회(☎741-2040)
 - 문화관광체육위원회(☎741-2050), 농수축경제위원회(☎741-2060)
 - 교육 행정에 관한 사항 : 교육위원회(☎741-2070)
- 홈페이지 접수(www.council.jeu.kr) : 소통·참여-도민참여-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
- 접수기간 : 2019. 10. 4.(금) 까지
- 문의처 : 민원홍보담당관실 (☎ 064-741-2203~4)



제주특별자치도의회